

# 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경쟁률 4:1 · 최종 '전북' 선정... 국비 140억원 확보

내년까지 장수군에 추구장 8배 크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전북도가 농식품부에서 전국 1개소 선정을 위해 공모한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에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능해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임대조건은 만18세~40세 미만의

청년들로, 1인당 400~500평을 3년간 임대하며, 임대료는 연 30만원(평균)이다.

도는 장수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공모준비에 돌입했으며,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장수군 유지 11.6ha (35천평)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5.5ha(17천평)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 중 70%인 국비를 1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장수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인력부족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북형 청년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스마트팜 확산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도가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준공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화해 청년 창업농 보육과 도내 농촌에 정착을 위한 개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은 152명에 달한다.

또한, 2단계로 이번 '임대형 스마트

팜'은 고령자인 장수군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시설원에 작물의 여름철 경영비를 절감하고, 여름작기의 강점을 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의 인큐베이팅과 가족단위 정착시스템 도입이 주목된다.

3단계로는 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500ha의 규모로 조성 계획 중인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청년농이 거주할 임대주택, 스마트팜과 노지 임대농장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번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농어촌 청년 뉴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호상 기자

# 도-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 '맞손'

FAO, 기아인구 감소, 식량대응 위기 등에 노력 · 행동 필요  
도, 상호협력 콘텐츠 개발 등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 요청



전북도가 2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취동위 사무총장과 양 기관 발원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이날 과학과 혁신, 디지털 적용 등 미래농업의 방향과 FAO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선(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및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대응 위기 등에 대한민국과 전북도의 각별한 노력과 행동을 요청했다.

신원식 도 정부부처장은 도 현황,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교류, 농업정책 등 FAO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

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고도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 육성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농업·농촌 가치 제고를 위한 삼각농정(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전라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가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수도로써 농업성장·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에 따라, 전북도의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상호협력 콘텐츠를 개발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자고 전했다.

FAO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극복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 인력양성을 통한 농업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에 소재한 40여곳의 농업관련 국가·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개도국 대 상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유호상 기자

## 전북연구원·이모빌리티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인구감소위지역 대응 · 회생 위한 전략 · 추진전략 모색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미래모빌리티포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하대 융합보안커뮤니티센터, 이모빌리티연구소와 위케이전시센터 추진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주최,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및 회생을 위한 전략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달 28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 실효성 있고 지역인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의 경제, 교통 문화, 관

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

다. 본 포럼은 인문석 의장(미래모빌리티포럼 전 전자정부추진위원장)의 진행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의 인구소멸 원인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정부관계자들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 관계자, 비즈모델 기획전문가,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해 각 지자체별 관련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리모트워킹의 확산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로 창조적 인력의 중장기적인 지방체류가 가능한 위케이전시이 지역인구활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유호상 기자

# 내년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공모 2건 선정 '꽤거'

전북도, 전동화 건설능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 ... 117.5억 확보

슈퍼카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 86억 확보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전동화 건설능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사업'과 '슈퍼카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130억원 포함 사업비 203.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자체공모를 통한 신청대상 사업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사업기회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업부 평가에 대

응해 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전동화 건설능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에 117.5억 원, '슈퍼카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86억 원 등 총 20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동화 건설능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은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건설·농기계용 전기구동 방식의 친환경 동력원(이차전지·하이브리드)으로 기술을 전환하는 사업이다.

전동화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확충, 기획·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제품양산 등 전(全)주기 상용화 기술을 지원한다.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협력 플랫폼 구축, 현장 수요 맞춤형 제작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전동화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업의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사업 매출 743억 원, 고용 창출 178명, 생산인발 1,082억 원, 고용유발 335명 등이 기대된다.

'슈퍼카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고출력을 요하는 특수목적형 모빌리티(특장·건설기계·무인비행체·상용차)의 전동화에 적합한 슈퍼카패시터 이차전지·연료전지 융합 전동추진체 개발 및 모빌리티 적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슈퍼카패시터 적용 융합형 전동추진체 개발 및 시험·평가 장비 6종 구축,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한 전북도 미래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중소 특수 모빌리티 기업의 미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 매출 907억 원, 고용 창출 412명, 특수목적용 모빌리티 분야 생산인발 1,422억 원이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 도,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 실시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도내 한·육우, 젖소 및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소 및 염소 등 우재류 11천호 549천두(소 10천호 469천두, 염소 1천호 80천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백신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농가 272호(소 248호, 염소 24호)를 선정하고, 농가당 5마리씩 채혈해 검사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공수의 집중이 이

뤄지지 않는 자가 집중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그간 항체 양성을 저조했던 지역(80%미만)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 결과 항체 양성을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별로 16마리를 추가 채혈해 확인 검사하고 확인 검사에서도 백신 항체 양성을 기준(소 80%, 염소 60%)미달인 농가는과태료 부과·백신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현장 지속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 도,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농가소득 평균 4700만원

전북도가 2021년도 도내 농가소득이 4,745만9,000 원으로 집계돼 2020년 4,428만4,000원 보다 317만5,000원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벼 병해충 발생,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농업소득 증가 폭이 줄었지만, 농외소득인 겸업소득(음식수박

업, 제조업 등)과 사업외소득(근로소득, 임대료, 배당금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또한, 농가소득은 지난 2017년 3,523만5,000원에서 2021년 4,745만9,000원으로 35%가 증가해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전국 평균 4,775만 9,000원의 99.4%로 근접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공고 제 2022-1188호

### 전주 도시관리계획(원고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7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원고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원고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정 도시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소 권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청	0	원고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진구 고량동 742번지 일원	-	중) 20,590	20,590	공회	

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정) 도시 및 도면 : 실용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권정사유

▶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청제 제출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1.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063-281-2447)
- 2. 관련도시 : 계획생략(공람장소 비지)
- 3.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서 연방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우편, 팩스(063-281-3515), 이메일(ards0803@korc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상기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maeil.com)에 게시되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전주시 장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